BARUN LAW
법무법인(유한) 바른

법무법인(유한) 바른

바른 Law & Policy Brief

Vol.1 | 2025. 07.

Summary & Insight

I. 정치 및 주요 정책 동향

1. 국회 및 정당 동향

- (국회) : 추경, 상법개정안, 인사청문회 등 본회의 처리
- (민주당) : 원내대표 선출 및 전당대회 일정 확정
- (국민의힘) : 원내대표 선출 및 전당대회 일정

2. 행정부 주요 정책 동향

- (대통령실 및 정부) :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 각 부 장관 후보자 내정
- (부처) : 기획재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 고용노동부

II. 주요 입법 동향

1. 법률안 발의 및 제출 현황

2. 주요 쟁점 · 이슈 법안

III. 국회 주요 일정 및 정책 세미나

1. 세미나(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국가의 감축 책임 강화
-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AI 스타트업 육성으로 : AI 스타트업 · 중소기업 간담회

Summary & Insight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국회 및 정부의 및 주요입법과 정책동향을 정리하고 유의미한 내용을 제공하고자 "바른 Law & Policy Brief"를 발간합니다.

이번 첫 브리프에서는 6월4일 대통령 취임 이후 새롭게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와 대선 이후 여야의 새로운 정치적 재편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테마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국회 주요사항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상법개정안 처리,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 진행과 임명동의안 처리 등이 있었습니다. 정당 동향으로는 원내대표 선출 및 전당대회 일정 확정 등이 있습니다. 둘째, 행정부 주요 정책동향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각 부 장관 후보자 내정이 진행됐습니다.

이러한 6월의 동향은 7월 국회, 나아가 정기국회 운영의 출발점이 되는 것으로 앞으로 그 진행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정리하고 새로운 내각을 온전히 마련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책의 아젠다 세팅은 국정기획위원회와 각 부처 장관 인사의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입법과 정책토론회 역시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세팅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 공약과 정책방향과 관련된 법안들이 6월 중순 이후 본격적으로 발의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변화를 예상하고 선제적 대응을 갖추는 것은 산업과 기업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변화 예상과 관련해서는 바른의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정책 전망 및 분석'**을 참고하시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I. 정치 및 주요 정책 동향

1. 국회 및 정당 동향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은 총 31.8조 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투입을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규모 31.8조 원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30.5조 원보다 1.3조 원 증가한 것으로 민간소비 쿠폰 국비 보조율 상향(+5~10%p) 및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지원금 인상 등 총 2.4조 원 증액, 국채 발행 최소화를 위한 추가 절감 1.1조 원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관심의 대상이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 대상으로 1인당 15~55만 원 규모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국회는 7월3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사외이사를 감사위원과 분리선출하는 것에 있어 3%룰[1]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됐던 ▲집중투표제[2] ▲감사위원 확대 방안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후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1]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 3%룰 도입 시 경영권 집중 억제 및 투명성 제고의 효과가 기대되나, 적대적 M&A 및 경영리스크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2] 이사 선임시 주주가 지분에 따라 복수의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소액주주 권한 확대의 측면이 있으나, 기업 경영 불안정 우려 주장도 있음.

[이재명 정부 주요 인사 인사청문회]

- **(국무총리 후보자)**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4일 김민석 의원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을 진행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4~25일 진행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7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는 개인 신상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부분은 공개되지만 대북 정보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정책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 6월23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6월25일 취임했습니다.

[검사징계법 및 3특검]

- 국회는 지난 6월5일 본회의를 개최. 검사징계법 및 3건의 특검 법 등 총 4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 4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안	주요내용 (및 진행상황)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 징계 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로 확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명현 전 국방부 감찰단 고등 검찰부장 특검 임명 (조국혁신당 추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특검 임명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건희와 명태균 ·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특검 임명 (더불어민주당 추천)

◆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및 전당대회 일정 확정]

-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김병기 의원(3선, 서울 동작갑)이 선출됐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2일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정청래 의원 중에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전임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퇴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이며, 김민석 전 수석최고위원의 국무총리 발탁으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도 함께 뽑을 예정입니다.

◆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및 전당대회 일정]

- 지난 6월16일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국민의힘 원내대표에는 송언석 의원(3선, 경북 김천)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7월1일부터 비대위원장을 맡아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으며, 8월 중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 행정부 주요 정책 동향

◆ 대통령실 및 정부 합동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 이재명 대통령은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취임 이후 30일에 대해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라며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안 편성,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한 정상외교 복원 등의 주요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에 대해 '오직 국민'이라 말하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 일상화와 제도화 등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한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지난 6월16일부터 60여일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전현직 국회의원 및 민간 전문가 등(기획위원 55명, 전문위원 10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①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 및 국정과제 수립 ②별도 TF를 구성해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 ③중장기 조세·재정개혁안 제시 등의 활동을 진행하며, 오는 7월 말 대국민 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국정기획위원회 개요 >	
목표	대통령의 국정철학 등을 반영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방향 제시
기능	▲국정과제▲정부조직개편안 마련 등 '국정기획 및 인수 역할'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당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7개 분과(▲국정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 분권·균형발전특위, 국민주권위원회 및 국정자문단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 지명]

-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인선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각 부 장관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국회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7월 중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7/7 기준)

부처	장관 후보자	주요이력
기획재정부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교육부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외교부	조현	전 외교부 1차관
통일부	정동영	국회의원
법무부	정성호	국회의원
국방부	안규백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윤호중	국회의원
국가보훈부	권오을	전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현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보건복지부	정은경	전 질병관리 청장
환경부	김성환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여성가족부	강선우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전재수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

◆ 주요 부처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사태 동향 및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 심화 · 에너지 수급 차질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으며,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중동 상황과 금융 및 실물동향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16일 신정부 출범을 맞아 대미 협상 및 협상안 마련 과정에서 관세와 비관세, 산업 및 에너지 협력 등의 총력대응을 위한 '대미 협상 TF'를 구성했습니다.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16일부터 6월 말까지 2주간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 400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 집중 예방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등 장시간 · 공짜 노동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육아휴직 등 일 · 가정양립지원제도 위반사례 등 주요한 노동법 위반 사항을 집중 기획감독 했습니다.

II. 주요 입법 동향

1. 법률안 발의 및 제출 현황

◆ 6월 법률안 발의 현황

[국회 본회의 : 검사징계법 및 3특검법 처리]

- 6월 한 달간 새롭게 발의된 법률안은 총 474건[1]입니다. 주간 발의 현황 및 상임위별 법률안 발의 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6/2~27 기준)

구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합계
운영위		4	1	1	6
법사위	4	11	17	14	46
정무위	3	20	11	8	42
기재위	7	18	9	16	50
교육위		3	4	12	19
과방위		12	6	5	23
외통위		3	4	2	9
국방위		7	2	3	12
행안위	3	18	14	18	53
문체위		11	7	4	22
농해수위	2	11	8	15	36
산자중기위		9	10	6	25
복지위		14	10	11	35
환노위	1	11	12	10	34
국토위	2	10	17	21	50
정보위		2			2
여성위		1	1	2	4
기타	1		1	1	3
미확정	1	1		1	3
	24	166	134	150	474

[1] 6월2일~27일중 국회 법률안 접수 현황 기준.

2. 주요 쟁점·이슈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장겸 의원 (2025.06.1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나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 대한 규율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외 온라인 쇼핑몰들이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해외직구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해외사업자와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빅데이터 기술의 발달에 따라 광고형태가 진화하면서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몰 검색이나 구매이력 등을 수집하고 반영하는 맞춤형 광고가 늘어나고 있고, 다양한 온라인 매체의 활성화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외의 사이트에서 소위 인플루언서가 광고주에게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광고주의 상품을 추천하고 홍보하는 일명 뒷광고도 문제가 된 바 있음.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부당한 이용이나 유출 가능성, 기만적인 광고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맞춤형 광고 제공을 위하여 소비자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또는 인플루언서 등이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상품을 추천 · 보증하는 형태로 광고하는 행위 등을 규율하여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송석준 의원 (2025.06.1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탁 · 운용 기능의 법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가상자산은 자산운용, 거래, 결제 등 다양한 형태로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이 되고 있으나,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신탁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지 않아 신탁업자에 의한 보관 및 수탁 운용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명시하여, 신탁업자가 이를 수탁 · 보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수탁 시장의 제도화를 통해 연기금 · 기관투자자의 안정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1항제8호 신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송재봉 의원 (2025.06.1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소송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뿐만 아니라 침해 행위 자체의 입증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실효적인 증거 조사 절차가 미비하여 침해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해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증거보전 명령 및 증언녹취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 증명에 필요한 경우에도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수단 마련을 하고자 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안규백 의원 (2025.06.1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간정보의 국외반출을 결정하는 협의체는 회의록을 비공개하고 있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한 실정임.

한편, 구글 등 국외기업이 지속적으로 국내 지도데이터 등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면서 향후 관세 협상 등의 이유로 지도 국외반출을 결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건들을 법률에 미리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결정하는 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축척 2만 5천분의 1 이하인 지도까지만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측량성과를 반출받으려는 자는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건들을 명시하여 국가안보 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외기업이 국내법상 필요한 보안조치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 제5항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태년 의원 (2025.06.1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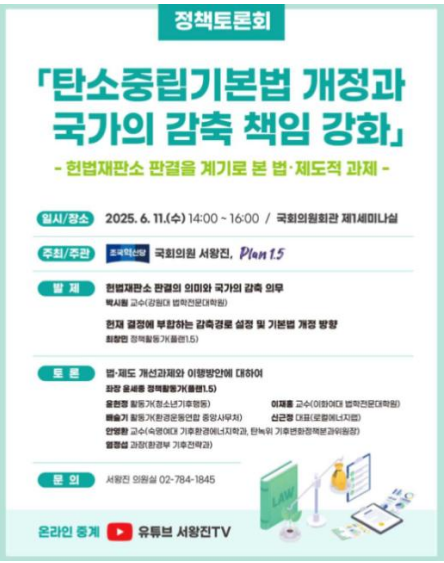
최근 반도체 등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고객 및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태양광 · 풍력 보급 목표 상향 등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투자가 필수적이나, 현재 투자 유인책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신 ·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하여 신 ·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4조).

III. 국회 주요 일정 및 정책 세미나

1. 세미나(토론회) 주요 내용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국가의 감축 책임 강화



일시	2025년06년11일
장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서왕진 의원실, Plan 1.5
발제자	박시원(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창민(Plan 1.5 활동가)
토론자	윤현정(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배슬기(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활동가) 안영환(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에너지 교수) 엄정석(환경부 기후전략과, 과장) 이재흥(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근정(로컬에너지랩, 대표)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6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는 헌법재판소의 '기후행동의무' 인정 판결을 계기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필요성과 국가 감축 책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본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의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권과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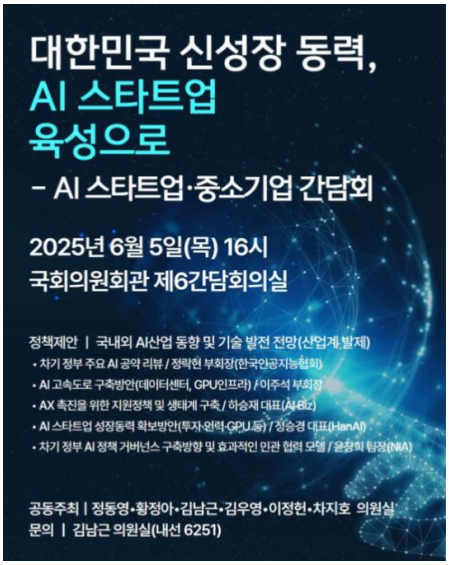
발제자인 박시원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는 2023년 헌재 판결이 환경권의 실체적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명문화한 점을 주목하며, ▲온실가스 감축 의무의 법률상 명시 ▲감축계획 수립 · 이행의 법적 강제력 확보 ▲탄소예산제와 이행평가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창민 활동가(Plan 1.5)는 '청소년 기후소송'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세대 간 형평성과 기후정의를 위한 법제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특히 감축 실패에 대한 국가 책임 명시, 사회적 약자 보호 조항 강화, 그리고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현실성, 법의 실효성 제고, 감축 계획 이행 점검 체계 및 시민의 감시권한 강화 등의 쟁점을 다뤘다. 특히, 단기 목표 부재, 느슨한 이행 책임 구조, 법령 간 정합성 부족 등의 현행 제도를 지적하며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적 정당성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법 ·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민주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AI 스타트업 육성으로 : AI 스타트업 · 중소기업 간담회



일시	2025년 06년05일
장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주최	김남근·정동영·황정아·차지호 ·김우영·이정헌 의원실
발제자	정락현(한국인공지능협회, 부회장) 이주석(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AI융합과학원 연구교수) 윤창희(NIA, 팀장) 정승경(한아이, 대표) 하승재(AI Biz, 대표)
토론자	김병훈(이스트시큐리티, CTO) 손장혁(인포보스, 대표) 최홍섭(마음에이아이, 대표) 박정호(뉴엔에이아이, CTO) 김건훈(한국인공지능협회 부회장) 전원(마이크로소프트, 상무) 이선우(tmax ai, 대표)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스타트업 · 중소기업 간담회」는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과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과방위 · 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산학연 전문가와 현장 기업인의 폭넓은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정락현 한국인공지능협회 부회장은 AI 기업이 마주한 비현실적인 규제와 투자 부족을 지적하며, 데이터 접근성과 GPU 인프라, AI 반도체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주석 교수는 의료 AI 기술의 상용화와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R&D 지원 체계를 제안했고, 윤창희 팀장은 공공 AI 서비스 확대와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NIA의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 정승경, 하승재 대표는 스타트업 현장의 규제 애로 및 투자유치의 어려움, 대기업과의 불균형한 생태계 문제를 언급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AI 윤리 및 안전성 확보 ▲AI 법 · 제도 개선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민관협력 확대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도 참여해 국내 AI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과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 점이 주목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AI 스타트업의 지속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입법 및 예산 지원의 계기로 평가된다.

BARUN LAW
법무법인(유한) 바른

관련 구성원

이영희 대표변호사

프로필보기

T. 02.3479.5756

E . yhlee@barunlaw.com

이용준 고문

프로필보기

T. 02.3479.7817

E . yongjun.lee@barunlaw.com

이수남 전문의원

프로필보기

T. 02.3479.6823

E . sunam.lee@barunlaw.com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바른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바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우) 06181 T. 02-3476-5599 | E. contact@barunlaw.com